

**Vol. 10**

2022.10.14.

# Customs & Trade News

HANJOO CERTIFIED CUSTOMS AGENCY



HANJOO

T. 02-2017-2204

F. 02-545-1682

W. <http://www.hjcustoms.co.kr>

통관사업1본부 안만복본부장 mbahn@hjcustoms.co.kr

통관사업2본부 박주경본부장 jpark@hjcustoms.co.kr

통관사업3본부 장진명본부장 jmjang@hjcustoms.co.kr

통관사업1본부 장민전임 mjang@hjcustoms.co.kr

## CONTENTS

I. 법령 개정사항

II. 입안 예고

III. 관세 및 FTA관련 동향

I. 법령 개정사항

1. 「관세법 시행규칙」 일부 개정

(1) 개정 이유

여행자의 편의를 제고하고 관광산업을 활성화하기 위해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2) 주요 내용

구분	내용
여행자 휴대품·별송품 면세한도 확대 (제48조 제2항 및 제3항)	여행자가 수입할 수 있는 휴대품·별송품의 면세한도를 미화 600달러에서 미화 800달러로 상향하고, 별도 한도인 술의 면세 한도를 1병에서 2병으로, 합산용량은 1리터에서 2리터로 늘림.
입국장 보세판매장 판매한도 확대 (제69조의4 제1항 및 제3항)	입국장 보세판매장의 판매한도를 미화 600달러에서 미화 800달러로 함.
용어의 순화 등 (별표 2)	관세가 면제되는 장애인용품에 스포츠용 보조기기가 포함됨을 명확히 하고, 장애인 차별적 용어인 '장애인'을 '장애인' 등으로 순화함.

	현 행		개 정(9.6.시행)		
기본 면세한도	미화 600달러	⇒	미화 <u>800달러</u>		
별도 면세한도	술	1병(1리터이하), \$400	술	<u>2병(2리터이하)</u> , \$400	
	담 배	200개비 (10갑)	⇒	담 배	좌 동
	향 수	60ml		향 수	좌 동

(3) 시행일

’22.09.06.

## I. 법령 개정사항

### 2. 「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 일부 개정

#### (1) 개정 이유

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상 사용되는 용어 중 일부를 순화하고, 어려운 용어를 알기 쉬운 용어로 바꾸려는 것임.

#### (2) 주요 내용

구분	내용
용어의 순화 등 (별표2의 2)	수입물품 중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장애인용품에 스포츠용 보조기기가 포함됨을 명확히 하는 한편, 장애인 차별적 용어인 '장애자'를 '장애인'으로 순화하고 그 밖의 어려운 용어를 쉬운 용어로 바꿈.

#### (3) 시행일

'22.09.06.

I. 법령 개정사항

3.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시행규칙」 일부 개정

(1) 개정 이유

위해가 발생하였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는 직접구매 해외식품 등에 관한 정보를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시할 수 있도록 하는 등의 내용으로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이 개정(2022. 2. 18. 시행)됨에 따라, 직접구매 해외식품 등에 관한 위해 정보 게시의 방법 등을 정하고, 우수수입업소로 등록한 자가 수입하는 품목에 대한 서류검사를 생략할 수 있는 요건을 완화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2) 주요 내용

구분	내용
특별관리영업자 관리대상 확대 (제26조 제1항 제3호)	수입신고를 하지 않고 수입식품 등을 수입하여 영업정지 처분을 받은 경우 특별관리영업자로 관리하도록 하여 경각심을 제고함.
수입신고 시 서류제출 의무 완화 (제27조 제1항 제7호 및 제8호)	축산물이나 협약을 체결한 국가의 수산물을 수입신고하는 경우에는 수출국에서 발급하는 위생증명서 등을 제출해야 하나,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인정하는 통신망을 통하여 확인할 수 있는 경우에는 별도로 제출을 생략함.
직접구매 해외식품 등의 위해 정보 게시방법 (제44조의2 신설)	직접구매 해외식품 등으로 인한 국민건강에 대한 위해를 방지하기 위하여 위해가 발생하였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는 직접구매 해외식품등의 제품명, 제조국 등에 관한 정보를 식품의약품안전처 홈페이지에 게시하도록 함.
우수수입업소의 서류검사 생략 요건 완화 (별표 9 제2호가목)	우수수입업소로 등록한 자가 연 5회 이상 수입신고한 품목으로서 최근 3년간 부적합 이력이 없는 경우 서류검사를 생략할 수 있도록 하던 것을 최근 3년간 연평균 5회 이상 수입신고한 품목으로 부적합 이력이 없는 경우에도 생략할 수 있도록 그 요건을 완화함.

(3) 시행일

’22.09.03

## II. 입안 예고

### 1. 「의약품 등의 안전에 관한 규칙」 입안계획

#### (1) 개정 이유

의약품등의 제조 및 품질관리기준(이하 “GMP”라 한다) 적합판정, GMP 준수 여부의 확인·조사 및 위반 시 적합판정 취소 등 조치와 제조·품질관리 조사관의 교육·훈련 실시 근거를 마련하는 내용으로 「약사법」이 개정(법률 제 18970호, 2022. 6. 10. 공포, 12.11. 시행)됨에 따라, GMP 적합판정의 대상, 신청 시 제출서류, GMP 준수 여부 확인·조사의 절차 및 제조·품질관리기준 교육·훈련기관 지정요건, 지정신청 서류 및 지정절차 등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

#### (2) 주요 내용

구분	내용
GMP 적합판정 절차 및 판정취소 기준 마련 등 (법 제48조의2제1항 등)	GMP 적합판정 신청 제출서류, GMP 준수 여부 확인·조사, 판정서 발급 및 위반 시 시정 명령 또는 적합판정 취소 등 조치 명령의 기준 등 의약품등 제조 및 품질관리기준 적합판정 제도의 운영절차를 정하고자 함
의약품등의 제조·품질관리 기준 교육·훈련기관 지정요건 및 절차 규정 등 (별표 1 등)	의약품등 제조·품질관리 조사관 교육·훈련기관 지정요건을 한국약품안전관리원, 법 제67조에 따른 약업단체 또는 의약품 관련 학과·전공이 설치된 대학 등으로 정하고, 제조·품질관리기준 교육·훈련기관 지정 신청 시 제출서류 및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의 제조·품질관리기준 교육·훈련기관 지정서 발급 절차를 규정하고자 함
의약품등 제조 및 품질관리 기준 위반행위 자진신고, 최초·소액의 경제적 이익등 제공기준 위반 및 중대한 약물이상반응 보고지연에 대한 행정처분 감면기준 마련 (별표 8 제12호)	의약품등 제조 및 품질관리기준 위반행위 행위를 자진신고한 의약품등 제조업자, 최초이면서 소액의 경제적 이익등 제공기준 위반자 및 천재지변 등으로 인해 보고기한을 경과하여 중대한 약물이상반응을 보고한 의약품등 품목허가권자에 대한 처분의 감면기준을 마련함.

#### (3) 의견제출기한 및 시행 일자

의견제출기한 `22년 11월 29일 / 시행 일자 `22년 12월 11일

### Ⅲ. 관세 및 FTA 관련 동향

## 1. RCEP 원산지증명서 전자본 발급 시행 안내

관세청은 「역내포괄적경제동반자협정」(이하 “RCEP”) 우리 수출기업의 RCEP 활용상 편의를 제고하기 위한 목적으로 RCEP 원산지증명서 전자본 발급을 지원하게 되었다.

발급 대상은 일선 세관 또는 상공회의소에서 발급하는 RCEP 원산지 증명서이며 발급 방법은 '22.9.1 RCEP 원산지증명서 분부터 발급이 승인된 경우 전자본을 PDF 파일로 다운로드를 통해 받을 수 있다. 단, 수출상대국이 중국, 일본, 호주, 뉴질랜드, 베트남, 싱가포르, 말레이시아, 브루나이인 경우에만 전자본 발급이 활성화된 상태이며 이는 향후 추가 및 변경될 예정이다.

단, RCEP 원산지증명서 전자본의 유효성 인정은 전적으로 수입국 국내 규정에 따르므로 발급 신청인은 해당 수입국에서 특혜 신청 시 전자본 제출을 허용하는지 여부를 사전에 확인하여야 한다. 아울러, 원산지증명서 전자본 제출을 허용하는 국가라도 상황에 따라 원산지증명서 종이본(원본)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는데 유의 하여야 할 것이다.

**관세청 UNI-PASS 상 발급방법 안내**

**대한상공회의소 원산지증명센터상 발급방법 안내**

증명서 종류	접수일자 (Application Date)	발급일자 (Issuance Date)	처리상태 (Status)	인쇄 (Print)
RCEP 원산지증명서 [rcep_cert]	2022-08-29 16:32	2022-09-01 00:00	발급완료 (Accept) 원본수령 1회 원본수령 2회 원본수령 3회 (6회)	인쇄 PDF 전자본 OVERRIDE

## Ⅲ. 관세 및 FTA 관련 동향

## 2. 관세청, 디스플레이산업 제품에 대한 품목분류 지침 발표

지난 '19.3 월, 우리나라가 주도한 가운데 세계관세기구(WCO) 품목분류(HS) 위원회에서 '디스플레이 모듈' 품목군 신설이 결정되었고, 이는 새로운 품목분류 국제기준(HS 2022)에 포함되어 올해 1월부터 적용됐다.

그럼에도, 새로운 국제기준 정착 과정에서 수출입기업과 관세사 등 관계자의 품목분류 관련 문의가 지속되었고, 해외 관세당국에서 개정 전·후 품목번호 연계가 잘 이루어지지 않아 우리 수출기업이 자유무역협정 세율 적용을 받지 못하는 등의 문제가 발생했다.

## 불명확한 품목분류로 인한 피해사례

- 우리기업 A 사가 모니터 제작에 사용되는 액정표시장치(LCD) 모듈 제품을 B 국에 수출하면서 '모니터 부분품'(품목분류코드: 제 8529 호, 관세율 0%)으로 신고했으나, B 국 관세당국에서 해당 물품을 '액정 디바이스'(품목분류코드: 제 9013 호, 관세율 4.5%)로 분류하여 약 60 억 원의 차액 관세를 추징 고지함('19.4 월)
- 관세청은 해당 건을 세계관세기구(WCO) 품목분류위원회(HS 위원회)에 안건으로 상정하였으며, 제 68 차 품목분류 위원회('21.9 월)는 동 제품을 '모니터 부분품'(제 8529 호, 세율 0%)으로 결정 → B 국은 A 사에 대한 처분을 조정 중

제8529.90호 (기타 모니터 부분품)	<b>세액차이</b>	제9013.80호 (액정 디바이스)
	<b>60억원</b>	
B국 관세율 0%	(3년수출액기준)	B국 관세율 4.5%

이에 관세청은 지난 5 월 한국디스플레이산업협회, 삼성디스플레이, LG 디스플레이 등 산업계와 함께 「민·관 합동 프로젝트팀」을 구성하여 디스플레이 제품군에 대한 품목분류 가이드 마련에 착수했다.

「민·관 합동 프로젝트팀」은 올해 1 월 발효된 품목분류 국제기준(HS 2022)을 바탕으로, 총 285 종의 디스플레이 관련물품(①디스플레이 모듈 50 개, ②제조장비 155 개, ③원·부자재 80 개)에 대한 품목번호를 결정하고 이번 지침에 담았다.

디스플레이 품목분류 표준해석 지침 1 권 (목차)	
<div>  <div>디스플레이 HS 표준해석 지침</div> </div>	
1. 패널 (LCD, OLED 모듈 등 50개)	9
- 텔레비전용/모니터용/휴대용 기기/내비게이션용/차량용 등	
2. 제조·검사장비 (공정도 順 155개)	157
- 세정 / TFT증착/포토/식각/검사/증착/봉지/모듈 공정장비	
3. 원부자재 (공정도 順 80개)	525
- 원료·소재(유리, 화학물질 등)/ 부품(IC, 세시 등)	

디스플레이 품목분류 표준해석 지침 2 권 (목차)	
<div>  <div>디스플레이 기술정보/표준용어집</div> </div>	
1. 한눈에 보는 디스플레이 기술정보	9
1-1 디스플레이 기초지식	
1-2 다양한 디스플레이 기술/공정	
1-3 디스플레이 미래기술	
2. 디스플레이 상식사전	159
- 픽셀(Pixel), 시야각, 편광판, LTPS 등 #17장	
3. 디스플레이 표준용어집	199
3-1 LCD, OLED, FED, 3D, Flexible, touch 관련 용어(914개)	
* IEC 용어(618개), 전문용어(296개)	
3-2 백라이트 관련 용어	
3-3 측광량의 정의	
3-4 색온도와 상관 색온도	



이번 지침 발간으로 ❶ 정확한 품목분류 가이드 제공을 통한 수출입기업의 관세 등 비용 절감, ❷ 국제분쟁 대응을 위한 데이터베이스 구축, ❸ 디스플레이 산업 이해도 제고 효과 등이 기대될 것으로 보인다.

해당 지침은 관세법령정보포털 (<https://unipass.customs.go.kr/clip>) - [세계 HS] - [HS 가이드]에서 다운로드 할 수 있다.

관세법령정보포털상 디스플레이 HS 지침 조회 화면

관세법령정보포털 (CUP Customs Law Information Portal)

통합검색 | 세관-상품검색 | 상세검색

법령-판례 등 | 관세정보 | **세계HS** | 관세평가 | 관의기능 | 세수익 | 정보공개 | 관세제도

세계HS | 디스플레이 HS 표준해석 지침(UI-ULS-0404-025Q) | Home | 세계HS | HS 가이드 | 디스플레이 HS 표준해석 지침

HS정보 | HS 가이드 | 해외직접구매통목가이드 | 해외 품목분류 해설 | 관세율표 용어 가이드 | 품목분류확인방법 | 품목분류 국내사례 | 품목분류 외국사례 | FAQ

### 디스플레이 HS 표준해석 지침

전자제품의 첫 인상인 디스플레이(Display)는, OLED 세계시장 점유율 83% 등 반도체와 더불어 우리나라 수출을 이끄는 핵심 품목으로 무궁한 성장 잠재력을 갖고 있습니다. 이에 관세청은 관련 물품에 대한 품목분류 국제기준 신설을 위해 다각적으로 노력하였고, 그 결과 '22.1.1.부터 모든 나라가 공통적으로 사용하는 국제기준이 신설(제8524호)되어, 품목분류 편의성과 해석가능성을 한층 높였습니다.

**<1관> 디스플레이 HS표준해석 지침**  
 '22년 새롭게 바뀐 '디스플레이 모듈 (제8524호)'과 이를 제조하는데 사용하는 장비, 원부자재 등 총 285종의 관련물품에 대한 품목분류(HSK) 정보를 담고 있습니다. 품목분류는 수출입 통관이나 무역거래, 다양한 정책수립을 위한 통계작성 등에 필수적인 정보로, 기존 품목번호(HSK)와 물품 정보가 있다면 이 지침서를 활용하여 누구나 쉽고 빠르게 품목번호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 22.1.1. 기준으로 작성되어 향후 HSK 개정이나 품목분류 해석이 변경되는 경우 HSK 2022 내용 부분이 달라 질 수 있음

**<2관> 디스플레이 기술정보 / 표준용어집**  
 품목분류로 이해하는데, 기반이 되는 사전적 배경

## Ⅲ. 관세 및 FTA 관련 동향

## 3. 반도체장비 · 의료기기 등 대형 시설장비, 수입통관 규제완화

관세청은 9 월 19 일부터 분할하여 수입하고 있는 반도체 장비와 의료기기 등 대형 장비에 대한 수입 통관 규제를 완화하여 기업의 관세 부담을 완화하고, 통관 편의를 제고 하였다.

관세청은 거대 · 과중량 등 사유로 분할수입하고 있는 대형 장비의 경우 부분품별로 관세율을 적용하지 않고, 모든 부분품이 수입 완료될 때 완성품으로 수입신고를 수리하여 완성품 관세율을 적용시켜주는 '수리전반출' 제도를 운영하고 있다.

기존에는 1 개 국가로부터 부분품들이 분할수입되는 경우에만 수리전반출을 허용하여 업계의 불편 요인으로 작용하였으나, 앞으로는 글로벌 공급망 다변화를 반영하여 ①2 개 이상 여러 국가에서 각각의 부분품들이 수입될 경우에도 수리전반출을 허용하고, ②관련 서류 제출도 간소화함으로써 수리전반출 승인요건을 완화할 수 있게 하였다.

## 활용사례 1

A 부품(관세율 8%)과 B 부품(관세율 8%)으로 이루어진 반도체 대형장비 C(관세율 0%)를 생산하는 글로벌 반도체 장비업체가, A 부품은 미국 공장, B 부품은 영국 공장에서 생산함.

국내 반도체 제조업체는 반도체 제조에 필요한 C 를 조립 · 설치하기 위해 미국과 영국으로부터 각각 A 부품, B 부품을 수입하는 경우 기존에는 수리전반출을 활용할 수 없어서 관세를 납부하고 수입했으나, 제도 개선에 따라 수리전반출을 활용하여 관세를 납부하지 않고 수입함.

## 활용사례 2

A(수입업체)는 B(해외수출자)로부터 대형 물류설비를 분할수입하기로 함 이때, B 가 일부 부품이나 장비를 다른 업체(C)로부터 납품받아 수출하는 경우 A 는 기존에는 수출국 성능시험성적서, 제조증명서 등 관련자료를 제출하기 어려워 수리전반출 제도를 활용할 수 없었으나, 제도 개선으로 '완성품 계약 내용' 확인 자료만을 제출하고 제도를 활용함.

## 변경되는 수리전 반출제도 혜택

- 저세율의 '완성품 세번'을 적용받는 경우 기업의 세금부담 완화,
- 최종 수입신고분까지 세금납부가 유예되어 기업의 자금 유동성 확보
- 수입신고 수리전에 물품(부분품)을 반입하여 신속통관 혜택

## Ⅲ. 관세 및 FTA 관련 동향

#### 4. 소프트웨어 수출 전, 전략물자인지 확인하세요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이종호, 이하 '과기정통부')는 지난 9 월 22 일, 코엑스에서 소프트웨어 분야 새싹기업을 대상으로 「소프트웨어분야 전략물자 수출통제제도 설명회」를 개최하였다.

전략물자 수출통제제도는 국제수출통제체제 원칙에 따라 국제평화 및 유지, 국가안보를 위해 무기 또는 이의 운반수단인 미사일의 제조·개발·사용 등에 이용되는 물품, 소프트웨어 및 기술(이하 '전략물자')의 수출을 통제하는 제도로, 전략물자를 수출하려는 기업은 미리 정부로부터 수출 허가를 받아야하며, 만일 허가 없이 전략물자를 수출했다가 경찰청 단속 등으로 적발되면 「대외무역법」제 53 조에 따라 최대 7 년 이하의 징역 또는 물품 등 가격의 5 배에 해당하는 금액 이하의 벌금 등에 처해진다.

「전략물자수출입고시」에 따르면 소프트웨어도 전략물자에 해당된다. 모든 소프트웨어가 다 해당되는 것은 아니지만 대부분의 소프트웨어에서 활용되고 있는 보안소켓계층(SSL), 하이퍼텍스트 보안전송프로토콜(HTTPS), 가상 사설망(VPN) 등의 암호프로토콜이나 모듈이 포함되거나 대칭 암호 알고리즘의 키 길이가 56 비트를 초과한다면 수출 허가를 받도록 하고 있다.

이는 기본적인 암호화 기능에 해당하는 것으로, 단순히 보안 소프트웨어뿐 아니라 일반 소프트웨어에도 널리 사용되고 있어 전략물자 수출허가 대상에 해당함에도 대다수의 소프트웨어기업, 특히 새싹기업들은 이에 대한 정확한 인지가 없어 불법 소프트웨어기업으로 낙인 찍히거나 잠재적 단속 대상이 되고 있다.

과기정통부는 새싹기업들의 이러한 어려움 해결을 위해 설명회를 개최하여 소프트웨어와 관련된 전략물자 판정 및 허가 사례와 예외 인정 사례 등을 설명하고 실무 중심의 비법 공유를 위해 영림원소프트랩에서 사례를 발표하여 참가 기업들의 이해를 높였다.